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일본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 아베노믹스 3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목 차

---

## ■ 일본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 아베노믹스 3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일본경제, 경기 하방 압력 고조 .....	1
2.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 변화 평가 .....	2
3. 시사점 .....	13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요약 >

#### ■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경제

아베내각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디플레 탈출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일본경제는 최근 들어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경제는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고, 이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3년 간 추진되었던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 ■ 아베노믹스 3년 평가

아베노믹스의 금융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성장 전략) 등 3개의 화살의 정책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난 3년 간 일본경제 변화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통화부문의 양적·질적 완화는 통화량 증대로 인한 엔저 기조 정착과 플러스 물가 상승률 달성이라는 성과는 있었지만, 대외 거래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원통화량은 2012년 말 대비 2015년 약 2.6배 증가했고, M2 월 평잔 증가율은 동기간 2%대 중반에서 3%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엔/달러 환율도 동기간 월 평균 약 40% 상승했고, 실질실효환율도 약 23% 하락하는 등 엔저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대내외 가격차(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1 이하면 자국 내 생산이 유리)가 2012년 말 이후 1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출은 총액(달러)과 물량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12년 600억 달러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 재정 확대는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재정 건전성은 지속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내각은 총 4차례의 경기 대책을 통해 약 20조 엔의 추경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플러스 수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출이 이어지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015년에 많게는 약 2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성장 전략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가계로의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2015년 3/4분기 누적 63조 엔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고용 부문은 실업률이 2012년 4% 중반에서 2013년 3%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이 1을 상회하는 등 양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질적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임금 수준도 2015년 들어 전년동기비 상승세이나,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더욱이, 소비종합지수도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기점으로 급락한 뒤 이전의 개선세

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소비 회복력도 미약하다. 이처럼 기업 경영 실적 개선, 기업 투자 확대,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가,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지난 3년 간 평균 0%대 성장에 그쳤고, 상승세가 이어지던 소비자물가도 최근 들어 0%대로 복귀하는 등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내각 집권 후 추진된 일본경제 재생전략인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아베노믹스가 꾀했던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 변화 평가 결과 >

구분	주요 평가 결과
금융·통화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화 및 환율</b> : 통화량 증대로 엔저 기조 정착</li> <li>· <b>물가</b> : 소비자물가는 플러스 전환했지만, 최근 0%대 복귀</li> <li>· <b>대외거래</b> : 수출입 감소세 지속(달러 기준),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li> </ul>
기동적인 재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재정의 경제 성장 기여도</b> : 정부지출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li> <li>· <b>재정 건전성</b> : 재정 적자 지속으로 국가부채 증가(재정 건전성 악화)</li> </ul>
성장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업에서 가계로의 경제 선순환 고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수익 및 투자 확대</li> <li>- 고용과 임금 등 가계 여건의 질적 개선 지연</li> <li>- 가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 심리는 개선</li> </ul> </li> <li>· <b>경제 성장 및 물가 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2015년 평균 0%대 성장에 그침</li> <li>- 물가 상승기조 유지 속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 고조</li> </ul> </li> </ul>

■ 시사점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 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저출산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심화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이고 대중적인 경기 대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경제 주체들의 미래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 특히, 국가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 투자 수준의 유지와 생산 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는 물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효율성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정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하되, 정책 실기의 예방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런 경기 둔화나 하방 압력에 대응할 때는 경기 회복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그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토론문화의 확산, 사회적 합의기구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1. 일본경제, 경기 하방 압력 고조

○ 아베내각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디플레 탈출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최근 들어 일본경제의 재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

- 소비세 인상 후 회복세가 미약한 일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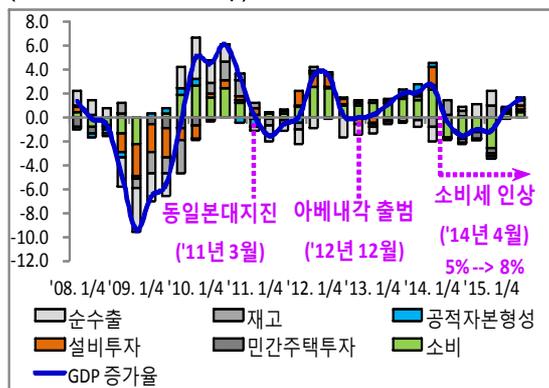
- 아베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경제는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에서 8%로 3%p 인상) 이후 2015년 1/4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전년동기대비 기준, 이하 동일)
- 이후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소비세 인상 이전의 회복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04년에 이어 2015년에도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sup>1)</sup>

- 2016년에도 경기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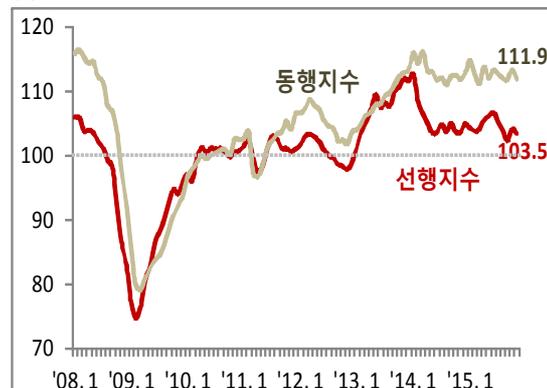
- 경기 현 상황을 말해주는 동행지수와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모두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고 있으나,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

○ 이에 지난 3년 간 추진되었던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평가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일본의 경제 성장을 및 기여도 추이 > < 일본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추이 >  
(전년동기대비 %, %p) (p)



자료 : 日本 内閣府.  
주 : 소비=최종민간소비지출+정부소비, 재고=민간재고+공공재고.



자료 : 日本 内閣府.  
주 : 동행지수는 일치(一致)지수를 말함.

1) IMF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2015년 0.6% 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용하여 4/4분기 경제성장률을 추정해보면 1% 초중반 수준에 달함.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 2016.

## 2.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 변화 평가

### 2-1. 평가 방법

- 아베노믹스의 금융·통화 완화(대담한 금융정책), 재정 확대(기동적 재정정책), 구조개혁(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의 정책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난 3년간 일본경제 변화에 대해 평가함

#### <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 변화 평가 내용 >

구분	주요 평가 항목	최종 성장 목표 및 물가
금융·통화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질적 완화 결과 및 영향에 대해 평가</li> <li>- 통화, 환율, 대외거래</li> <li>- 기업경영 및 가계 여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률 : 명목 3%</li> <li>· 물가상승률 : 2%</li> </ul>
기동적인 재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및 재정건전성에 대해 평가</li> <li>-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li> <li>-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부채</li> </ul>	
구조개혁 (규제개혁& 성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통화 완화 부문의 평가와 최종 성장 목표 및 물가 평가를 통해 평가</li> </ul>	

### 2-2. 일본경제 변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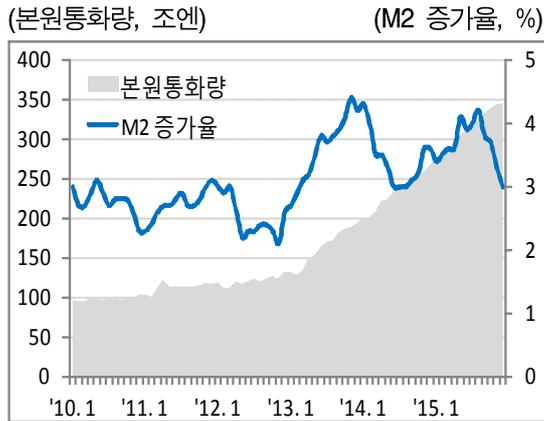
#### ① 금융·통화 부문의 양적·질적 완화의 영향

- (통화량 및 통화유통속도) 아베내각 출범 전후를 비교하면 명목 GDP가 증가하면서 통화량(M2) 증가세와의 격차가 축소된 반면, 통화유통속도는 하락

- 통화량의 증가와 더불어 M2 증가율도 아베내각 출범 이전 수준을 상회
  - 본원통화량은 2012년 12월 평잔 132.0조 엔에서 2015년 말 평잔 346.4조 엔으로 약 2.6배 증가
  - M2 월평잔 증가율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2년 평균 약 2.5% 수준에서 이후 2015년 말까지 약 3.6% 정도로 1%p 이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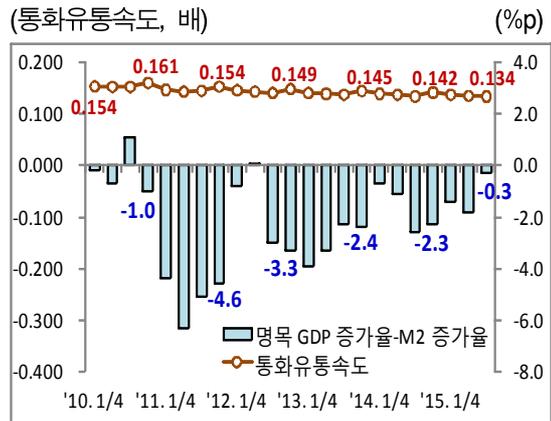
- 통화유통속도는 하락하고 있으나, 명목 GDP와 M2의 증가율 격차는 축소
  - 통화유통속도는 2012년 4/4분기 0.149배에서 2015년 3/4분기 0.134배로 하락
  - 하지만, 명목 GDP가 2013년 2/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상승하면서 M2 증가율과의 격차가 축소

< 월평균 본원통화량 및 M2 증가율 추이 >



자료 : 日本銀行.  
주 : M2=현금+예금+준통화+양도성예금.

< 통화유통속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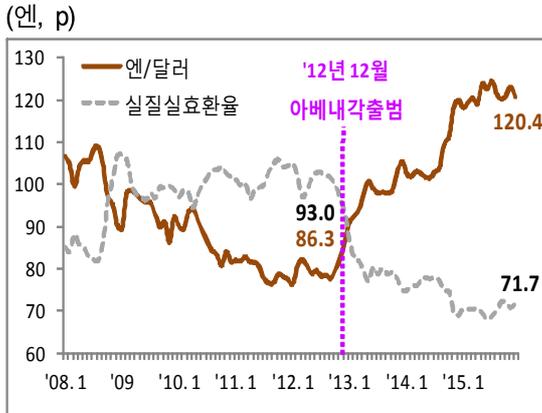
자료 : 日本銀行자료로 현경원 작성.  
주 : 통화유통속도=명목GDP/M2(분기말 평잔).

○ (환율 및 대내외 가격차) 아베내각 집권 이후 엔저 기조가 정착하는 가운데 대내외 가격차도 하락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경쟁 기반 강화

- 엔저 기조의 정착
  - 엔/달러 환율은 2012년 말 86.3엔에서 2015년 말 120.4엔으로 약 39.5% 상승
  - 실질실효환율도 동기간 93.0에서 71.7로 약 22.9% 하락, 엔화 저평가 가속)
- 대내외 가격차 하락
  - 대내외 가격차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1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자국 내 생산이 불리한 반면 1 이하이면 자국 내 생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
  - 대내외 가격차(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는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2년 말 이후 1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년 말까지 평균 0.85배 정도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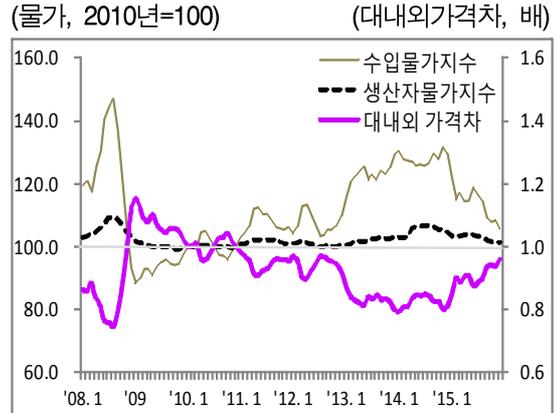
2)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지난 2015년 6월 67.8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1982년 11월 74.2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임. 특히, 2015년 들어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70엔대 초반에서 60엔대 후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이상 엔/달러 환율은 도쿄외환시장 엔/달러 스팟시장의 17시 일일 증가 기준 월평균임. 日本銀行 참조.

< 엔/달러 실질실효환율 추이 >



자료 : 日本銀行.

< 대내외 가격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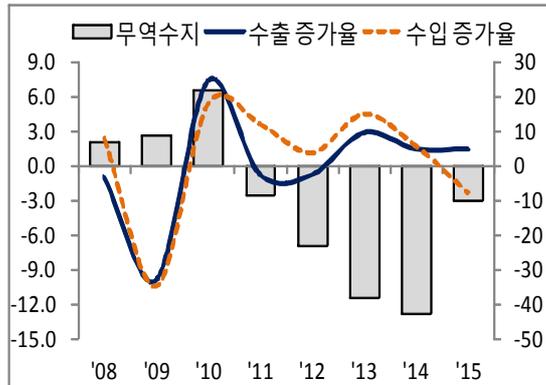
자료 : 日本銀行 자료로 현경원 작성.

주 : 대내외 가격차=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 (수출입 및 경상수지) 달러 기준 수출입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크게 축소된 반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
  - 엔화 기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축소
    - 엔화 기준 수출 증가율은 2013년부터 2015년(11월 누적 기준)까지 3년 연속 증가세가 지속
    - 엔화 기준 수입은 2014년까지 지속 확대되었으나, 2015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약 3조 엔으로 크게 축소
  - 달러 기준으로는 여전히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크게 감소
    - 달러 기준 수출은 2012년 2% 감소 이후 2015년까지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한편, 달러 기준 수입은 201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015년에는 두 자릿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4년 약 1,228.3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3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축소
  - 한편, 경상수지는 201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600억 달러를 상회하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14년 약 240억 달러까지 축소<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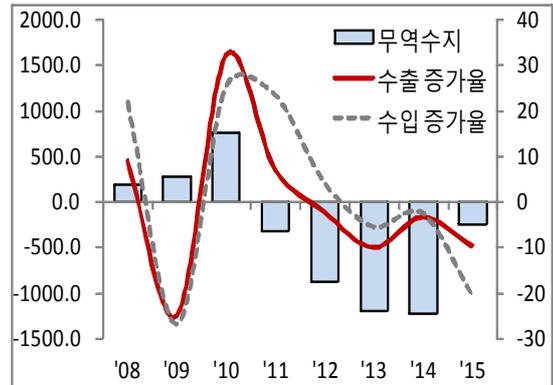
3) 2015년에는 1/4분기 371억 달러의 흑자 시현. 이상 IMF.

**< 엔화 기준 수출입 추이 >**  
(무역수지, 조엔) (수출입 증가율, %)



자료 : JETRO.  
주 : 2015년은 1~11월 누적 기준.

**< 달러 기준 수출입 추이 >**  
(무역수지, 억달러) (수출입 증가율, %)



자료 : JETRO.  
주 : 2015년은 1~11월 누적 기준.

**<참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입 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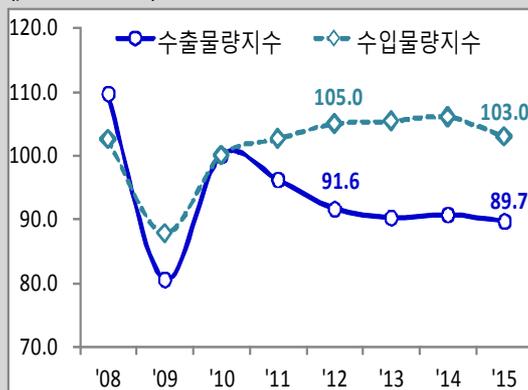
○ 수출물량

- 수출물량지수는 2014년 들어 소폭 상승했으나, 2015년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2012년 수준으로도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수입물량

- 수입물량지수는 2012년 105.0으로 전년대비 2.3% 상승한 이후 점차 둔화, 2015년에는 하락세로 전환

**< 수출입 물량지수 추이 >**  
(p, 2010=100)



자료 : JETRO.  
주 : 2015년은 1~11월 누적 기준.

**< 수출입 물량지수 증감률 추이 >**  
(%)



자료 : JETRO.  
주 : 2015년은 1~11월 누적 기준.

○ (기업 경영 여건) 기업 이익이 증대하면서, 설비투자도 증대하는 등 기업 경영 여건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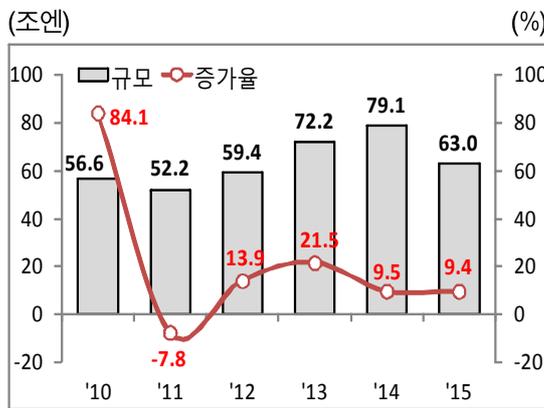
- 기업 수익 증가세 지속

· 2012년 이후 일본기업들의 경상이익이 지속 증가, 2015년에는 3/4분기까지 누적 63조엔에 달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임

-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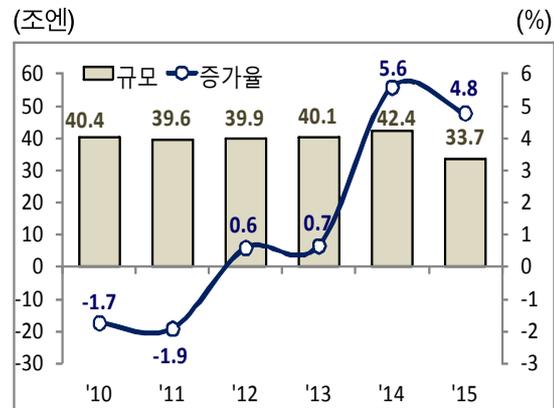
· 2013년까지 0%대에 머물렀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4년 들어 5.6%, 2015년 3/4분기까지 누적 4.8%(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산업 경상이익 추이 >



자료 : 日本 財務省.  
주 : 2015년은 1~11월 누적 기준.

< 전산업 설비투자 추이 >



자료 : 日本 財務省.  
주 : 2015년은 1~11월 누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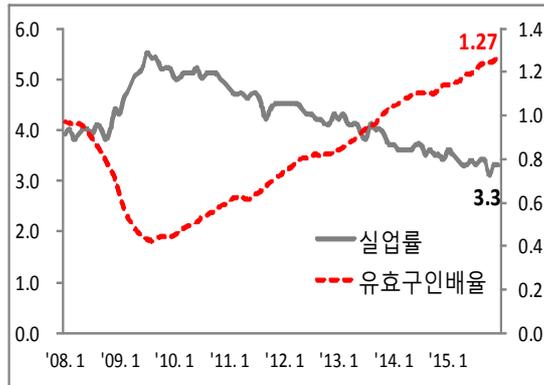
○ (가계 여건) 고용의 양적 개선을 바탕으로 한 질적 개선이 시작되는 한편 미약하나마 임금과 소비가 개선

- 고용 부문은 양적인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질적 개선도 시작

· 2012년에 4.5%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최근 3.3%로 하락했고, 유효구인배율도 2013년 11월부터 1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상승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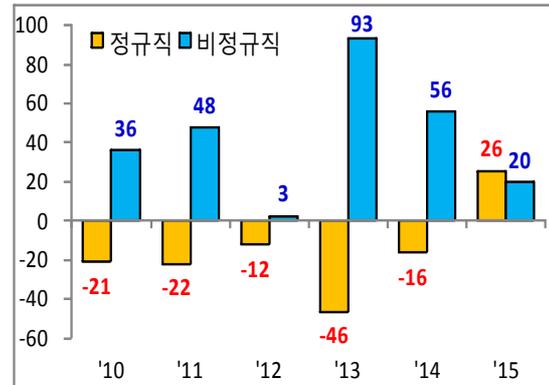
· 한편, 2013년과 2014년 누적 62만 명의 정규직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149만 명이 증가, 2015년 들어 정규직이 26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거 2년 간 감소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실업률 및 유효구인배율 추이 >  
(%) (배)



자료 : 日本 厚生労働省.  
주 : 2015년은 1~11월 누적 기준.

< 정규직·비정규직 증감 추이 >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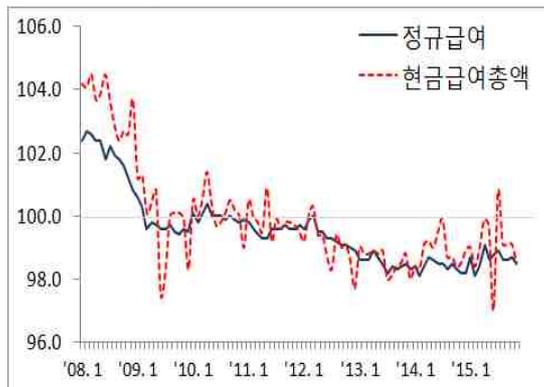


자료 : 日本 厚生労働省.  
주 : 2015년은 1~11월 누적 기준.

- 임금 수준은 미약하나마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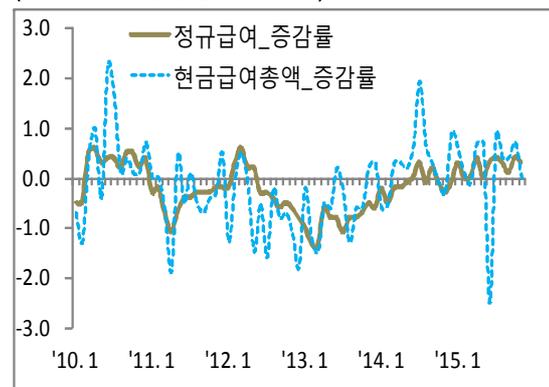
- 정규급여 및 현금급여 실질지수는 2015년 중반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소폭이나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실질 임금지수 추이 >  
(p, 2010=100)



자료 : 日本 厚生労働省.  
주 : 5인 이상 전산업.

< 실질 임금지수 상승률 추이 >  
(2010=100, 전년동기대비 %)



자료 : 日本 厚生労働省.  
주 : 5인 이상 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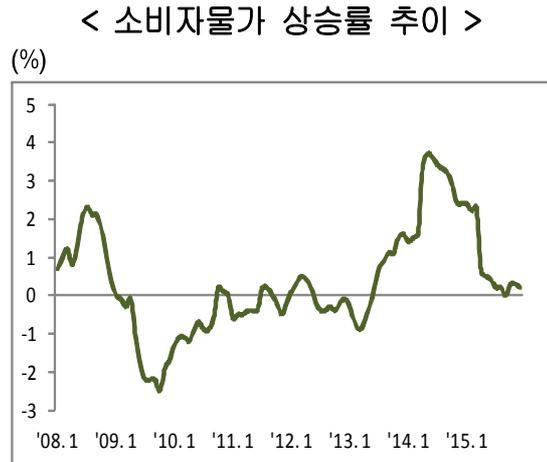
- 소비자심리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는 대폭 하락

- 가계 소비실태를 보여주는 소비종합지수는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 → 8%)을 기점으로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2012년 수준으로 하락
- 단,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 향후 가계 소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소비자물가도 2014년 소비세 인상 후 3%대 후반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최근 0%대 초반에 머물러 있음



자료 : 日本銀行.  
주 : 일반세대 기준.



자료 : 日本 總務省.  
주 : 5인 이상 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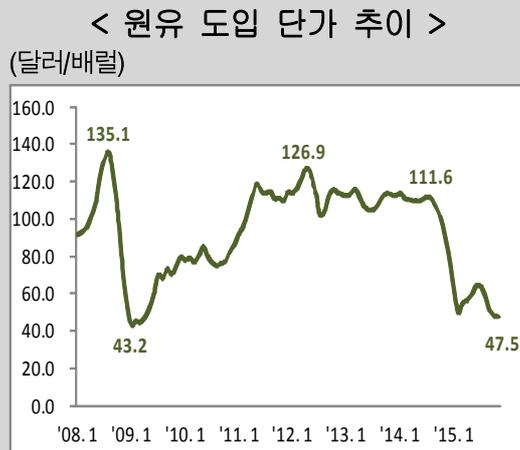
**<참고> 원유 도입 단가 변화와 물가**

○ 원유 도입 단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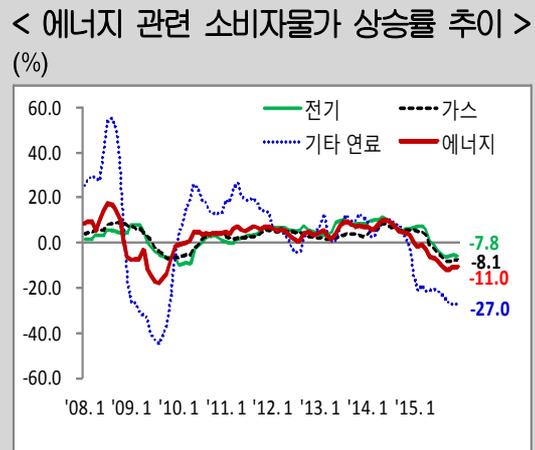
-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일본의 원유 도입 단가는 2012년 4월 126.9달러에서, 2015년 11월 47.5달러로 약 63% 하락

○ 에너지 관련 소비자물가 하락세 지속

- 에너지 관련 소비자물가도 2014년 말부터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2015년 말에는 적게는 전년동기대비 5%에서 27%까지 하락



자료 : JETRO.



자료 : 日本 總務省.

② 재정 정책의 영향

○ (경제 성장에 대한 재정의 기여) 아베내각은 총 4차례의 경제대책을 추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

- 4차례의 경제 대책 추진

· 아베내각은 총 4차례의 경제 대책을 통해 19.9조 엔의 추경예산(총 25.4조 엔의 국가 재정 투입)을 투입

-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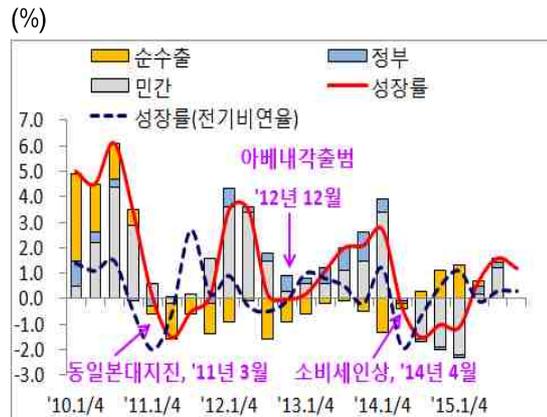
· 2014년 2/4분기~2015년 1/4분기의 4분기를 제외하면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플러스 수준을 유지  
 · 단, 최근 들어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약화되고 있으나, 2015년 12월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 2016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아베내각의 경제대책과 규모 >

시기	추경 목표	규모
2013년 6월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13.1조엔
2013년 10월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	5.5조엔
2014년 12월	지방에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3.5조엔
2015년 12월	1억총활약사회 등	3.3조엔

자료 : 日本 内閣府.

< 경제 성장률 및 기여도 추이 >



자료 : 日本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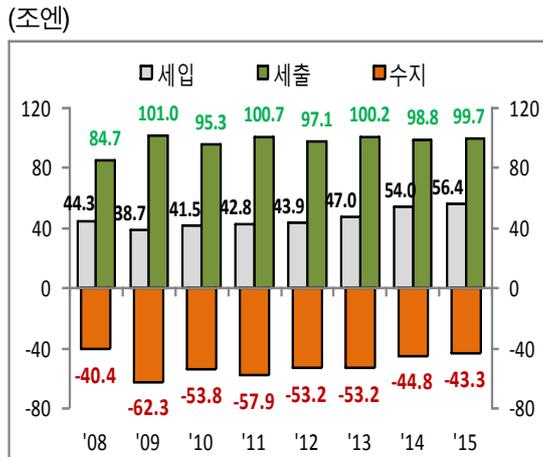
주 : 2015년 4/4분기는 IMF 전망치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 (재정 건전성) 대규모 재정적자의 지속으로 GDP 대비 국가 비중이 지속 상승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

-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

· 세수 적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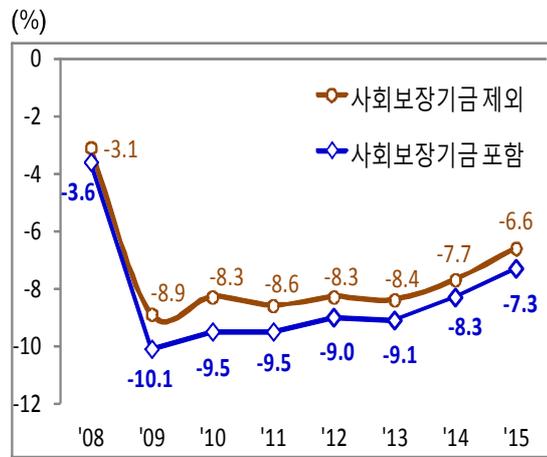
< 세입·세출 추이 >



자료 : 日本 内閣府, 財務省.

주 : 2013년까지는 결산, 2014~2015년은 추정치로 각년도(당해 4월~다음해 3월) 기준.

<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추이 >



자료 : OECD.

주 : 2014년은 당초 예산 반영, 2015년은 추정치.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의 상승세 지속

- 순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2015년 약 147% 수준에 달할 전망
-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은 OECD가 2015년에 약 234%에 이를 것으로 추정, IMF는 이보다 높은 약 246%에 달할 것으로 추정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추이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ECD	순채무	95.3	106.2	113.1	127.3	129.4	137.2	142.9	146.8
	총부채	171.1	188.7	199.3	209.5	216.5	224.2	230.0	233.8
IMF	총부채	191.8	210.2	215.8	229.7	236.6	242.6	246.2	245.9

자료 : OECD(2014. 11). IMF(2015).

주 : 1) OECD 전망치는 2014년은 당초 예산 반영, 2015년은 추정치.

2) IMF는 2014년부터 추정치.

③ 경제 성장 및 물가 목표

○ (물가 목표) 주요 물가 지표들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아베노믹스의 물가 목표에는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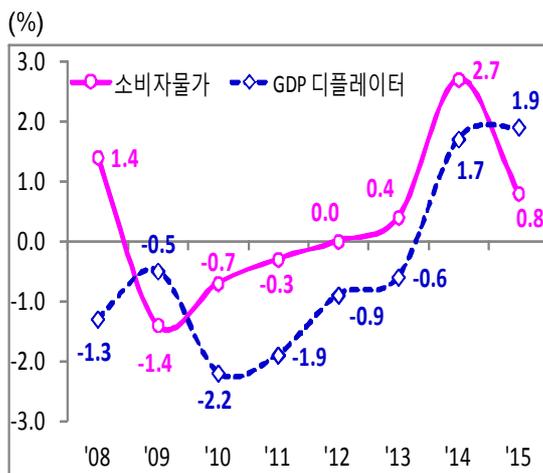
- 아베내각 집권 후 3년 간(2013~2015년) 소비자 물가는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에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한편, GDP 디플레이터는 동기간 평균 1% 상승, 201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 (경제 성장 목표) 아베내각은 여러 차례의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해 왔으나, 성장 목표에는 이르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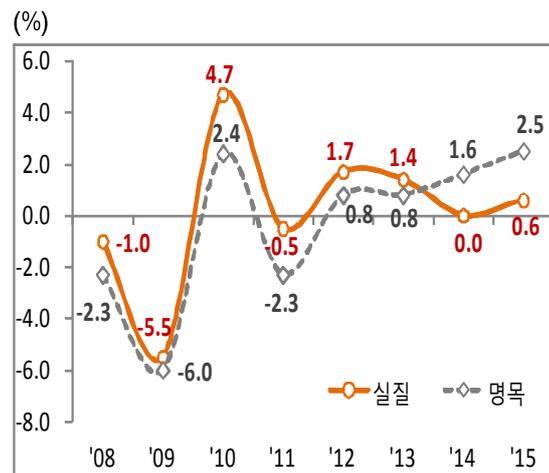
-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 3년 간 평균 0.7% 정도 수준에 불과했으며, 명목 GDP 성장률도 동기간 평균 1.6% 수준에 그쳤음

< 소비자물가 및 GDP 디플레이터 추이 >



자료 : 日本 内閣府, IMF.  
주 : 2015년은 IMF.

<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 추이 >



자료 : 日本 内閣府, IMF.  
주 : 2015년은 IMF.

2-3.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 (종합 평가) 아베내각 집권 이후 추진된 일본경제 재생전략인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아베노믹스가 꾀했던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1차 아베노믹스는 금융·통화 완화로 엔저 기조를 정착시키고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담보로 한 재정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하지만, 기업 경영 개선과 투자, 고용,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고리 형성에 실패하면서 경제 성장 및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물가도 0%대로 재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심화 우려가 고조
- (향후 전망) 아베내각은 일본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1억 총활약사회 만들기' 전략과 마이너스 금리(일본은행)을 아베노믹스 2탄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경제가 단기간 내 완전한 회복세로 전환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 변화 평가 결과 >

구분	주요 평가 결과
금융·통화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화 및 환율</b> : 통화량 증대로 엔저 기조 정착</li> <li>• <b>물가</b> : 소비자물가는 플러스 전환했지만, 최근 0%대 복귀</li> <li>• <b>대외거래</b> : 수출입 감소세 지속(달러 기준),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li> </ul>
기동적인 재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재정의 경제 성장 기여도</b> : 정부지출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li> <li>• <b>재정 건전성</b> : 재정 적자 지속으로 국가부채 증가(재정 건전성 악화)</li> </ul>
성장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업에서 가계로의 경제 선순환 고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수익 및 투자 확대</li> <li>- 고용과 임금 등 가계 여건의 질적 개선 지연</li> <li>- 가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 심리는 개선</li> </ul> </li> <li>• <b>경제 성장 및 물가 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2015년 평균 0%대 성장에 그침</li> <li>- 물가 상승기조 유지 속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 고조</li> </ul> </li> </ul>

4) '1억 총활약사회 만들기'란 아베노믹스 2탄으로 'GDP 600조엔', '희망출생률 1.8명', '간병이직제로'의 新3개의 화살을 실현하고자 하나, 이는 일본경제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3. 시사점

-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 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저출산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심화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함
- 첫째, 단기적이고 대중적인 경기 대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잠재 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일본만큼 경제 활력이 저하된 상황은 아니나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고령화·저출산 현상 심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이의 해소가 가장 시급함
    - 지난 3년 간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된 아베노믹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데는 경기 측면에서는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한 실물 경제의 선순환 고리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경제·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고령화·저출산 현상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영향을 미침
  - 국가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 투자 수준의 유지, 생산 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함
    - 규제시스템 전반의 합리화, 신성장 동력의 조기 산업화, 고부가·고기술 중심 산업 구조의 고도화, 제조업 중심의 산업 지원 정책의 전환, 국내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통해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해야 함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함
    - R&D 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증대, 국가 지식재산의 활용도 제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벤처의 산업화 등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효율성 증대를 유도해야 함

- 둘째, 재정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하되, 정책 실기의 예방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재정 정책의 경우, 갑작스런 경기 둔화나 하방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적인 측면도 중요하나, 정책 실기가 있을 경우 대중적 효과에 그칠 뿐 오히려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컸으나, 이후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 회복력을 상실시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유발하여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셋째,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다양한 갈등을 유발,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화·저출산, 경제·산업 구조 변화 등의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이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들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토론문화의 확산, 사회적 합의기구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동북아연구실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